

글로벌 식품시장 ESG 경영 도입현황

2022.11.08

[목 차]

I. 개념 및 배경	4
1. ESG 개념	4
2. ESG 의의	5
II. 글로벌 ESG 정책 현황	8
1. 환경(E)	8
2. 사회(S)·지배구조(G)	12
3. ESG 전반	14
III. 글로벌 ESG 관련 식품기업 경영사례	15
1. 환경(E)	15
2. 사회(S)	17
3. 지배구조(G)	19
IV. 결론 및 요약	20
1. ESG 경영의 필요성	20
2. 정책 사례	21
3. 기업 사례	23

글로벌 식품시장 ESG 경영 도입현황

1. 개념 및 필요성

- 환경(E) · 사회(S) · 지배구조(G)의 약자로,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측면의 비재무적 지표
 - *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함
 - * 지속가능성과 기업 윤리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며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정부, 소비자, 협력사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

2. ESG 관련 주요국 정책

- 주요국은 주로 환경 · 사회 관련 정책을 도입 · 시행 중

환경(E)

-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 (일본) 녹색성장전략, 녹색 식품시스템 전략, 식품손실감소추진법
- (중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행동백서, 14차 5개년 순환경제발전규획 (2021-2025)
- (미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국가재활용전략, 공정전환경쟁법(발의)
- (EU) 유럽 기후법, 탄소국경조정제도, 순순환경제행동계획, 탄소국경조정제도

사회(S)

- (일본)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2020-2025),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 (EU)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유럽시장 진입 규제안(발의)

ESG 전반

-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책임 있는 식품사업 및 마케팅 실천을 위한 EU 행동강령

3. 식품기업의 ESG 경영 적용 사례

- (환경) 경영사례는 탄소 중립 · 친환경 포장 · 폐기물 감축 · 환경 보존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 기업 내 남녀평등, 인종적 다양성 확보 · 공급망 관리 ·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경영사례가 주를 이룸
- (지배구조) 기업 차원의 부정부패 예방 및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영사례가 주를 이룸

1. 개념 및 배경

1. ESG 개념

-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ESG 경영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환경), 사회적 책임(사회), 투명한 지배구조(지배구조)를 뜻함
-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의 비재무적 지표
 - 과거 기업의 가치는 경제적 성과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지표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ESG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
 - 즉, 기업의 ESG 경영 평가는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 기업가치 평가 및 비재무적인 성과지표의 역할을 함

〈표 1 -1〉 ESG 경영의 주요 주제

Environmenta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 에너지 효율 - 환경오염·환경규제
Socia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관리 - 근로자 안전 - 인권·성별 및 다양성 - 아동 노동 - 현대 노예
Governance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 및 반부패 - 기업 윤리 - 공정 경쟁 - 로비 및 정치 기부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2. ESG 의의

- 기업의 가치와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인해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됨
 - 정부, 고객,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의 ESG 경영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소비자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기업의 신용평가 등 각종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추세
- 영국, 유럽연합,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ESG에 관련한 기업 규제를 시행·강화하고 있음
 -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ESG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
 -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ESG 공시 의무화를 발표
 - 유럽연합은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로 ESG 관련 공시 의무를 확대
 - 홍콩은 2020년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및 2025년까지 금융사의 ESG 공시 의무화 발표
 -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모든 KOSPI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목표로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 또한, 탄소 배출과 관련한 환경 관련 규제를 시행·강화함
 - 미국·유럽연합·대한민국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
 -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발표
 - 규제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업체의 탄소배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함
- 기업의 ESG 경영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투자 결정을 위한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를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투자의 기준 또한 강화됨

- 대한민국의 경우 2016년 스투어드십 코드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도입했으며 2021년 기준 총 146개 기업이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 중
- 유럽연합의 주주권리지침 개정¹⁾, 대한민국의 공정경제3법²⁾ 등이 시행되는 것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됨
- 또한, 기업의 ESG 경영 행태에 따라 투자자는 기업 경영진·이사회 등에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투자를 배제하기도 함
 -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인 GPF는 석탄으로 전력 생산량의 30%를 발전하고,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는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함
 -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ESG와 같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시, 전략이 없는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신용평가기관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ESG 경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S&P(Standard&Poor’s), 피치(Fitch Ratings) 등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함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신용등급에 ESG 경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다른 신용평가기관도 ESG 경영을 기업 평가에 도입함
 - 대한민국의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기관은 2020년 ESG 채권 인증 평가사업을 실시

1)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 Directive):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의결권 자문기관, 임원 보상,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관한 개선조치에 관련된 지침

2) 공정경제3법: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 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 고객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 ESG 경영이 미흡한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며 이들의 협력체에도 ESG 경영이 요구됨
 - 2019년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 배터리에 콩고 어린이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한 코발트를 사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피소됨
 - 테슬라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100% 니켈 함유 배터리 개발 계획과 공급망에 있는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
 - 애플은 공급망 내 모든 협력체에 ESG 경영 관리를 요구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겠다고 발표함
- 공급망 내의 협력 업체뿐만 아닌 일반 소비자도 기업의 ESG 경영을 요구함
 - 글로벌 회계감사 기업 PWC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83%가 기업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76%의 소비자는 노동자·지역 사회·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II. 글로벌 ESG 정책 현황

1. 환경(E)

□ 환경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EU·일본·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각종 친환경 정책과 관련 규제를 시행·도입 중

- 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규제에 집중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
- 이외에도 순환 경제 시스템 조성을 위한 자원 재활용, 폐기물 감량과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시행 중
- 이러한 환경정책은 주로 식품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정책으로 시행됨
 - 식품산업에 집중한 환경정책으로는 유럽연합의 ‘책임 있는 식품 사업 및 마케팅 실천을 위한 EU 행동강령’이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 발표

- (대한민국)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21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기존의 2017년 대비 24.4% 감량에서 2018년 대비 40%로 상향
- (일본)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인 ‘녹색성장전략’ 발표
 - 2030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3년도 배출량의 46% 수준까지 감량하고,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탄소 중립 전략인 ‘녹색식품시스템 전략’을 발표
 - 녹색식품시스템 전략의 목표는 ①화학적 살충제의 위험성 완화, ②화학비료 사용 감축, ③유기농업지 비중 확대, ④식품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⑤지속가능한 식품 수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가 있음

- (중국) 2021년 기준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백서’ 를 발표
 -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배출량의 65% 수준으로 감량 예정
 -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 감량 전략인 ‘2030년 이전 탄소 배출정점 행동방안’을 발표
- (미국)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표방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2030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5년 탄소 배출량의 50% 수준으로 설정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①연방정부의 리더십, ②친환경 기술의 혁신, ③지방정부의 리더십, ④사회 전체의 행동을 제시
- (유럽연합)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럽기후법’ 을 제정
 - 탄소 배출 감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탄소감량 정책에 변화를 만들
 - 기존 온실가스감축목표였던 2030년에 1990년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량하는 것에서 55% 수준 감량으로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배출감량 계획을 수정함
 - (독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65% 수준, 2040년까지 88% 수준으로 감축하고 에너지경제·농업·건물 등 각 산업 분야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함
 - (프랑스) 2030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39.5% 감량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기후법’을 제정

□ 순환경제를 목표로 폐기물을 감량·관리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 (대한민국)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정책·전략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을 발표
 - 2027년 국내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을 20% 감소한 76.4%로 감량하고, 폐기물 발생량 중 실제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82.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

- **(일본)** 물품의 특성별로 세밀하게 재활용법을 시행해온 일본은 ‘20년 식품 폐기물 및 손실량 감축 법률인 ‘식품손실감소추진법’ 제정
 - 식품 손실 감소를 위해 정부·식품기업·소비자 등 행위자별 역할을 명시하고,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식품 손실 감소를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
 - (소비자청) 소비자·식품 관련 사업자의 교육·홍보 및 정책 홍보 담당
 - (문부과학성) 식품 폐기물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효율적인 정책 조사·연구
 - (경제산업성) 식품 관련 사업자가 진행하는 폐기물 감축 사업을 지원
 - (농림수산성) 푸드뱅크활동³⁾ 지원
 - (후생노동성) 세계 각국의 선진사례 수집 및 공유
 - (환경성) 식품 손실 감축 공헌자에 대한 포상·표창
- **(중국)** ‘14차 5개년 순환경제발전계획’ 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세부 목표와 이를 위한 3대 추진과제를 발표
 - 2020년 대비 자원 생산성 20% 향상, GDP 당 에너지소비량을 2020년 대비 13.5% 수준으로 줄이고, 고체폐기물의 재활용률 60% 달성 등의 목표를 발표
 - 순환경제를 위한 3대 추진 과제로 ①재활용산업 시스템의 구축 및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②농업 순환경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한 ③폐기물순환 체제의 구축을 선정
- **(미국)** 순환경제 시스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국가재활용전략’ 을 발표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제도를 시행 중
 - 국내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보다는 매립이나 수출 등의 방식으로 폐기물을 관리해왔던 미국은 국가 재활용률을 50%로 확대하기 위한 5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시함
 - ①재활용품 시장 확대, ②재활용품 수집 및 자재 관리 인프라 개선, ③재활용 과정의 폐기물 오염 감소, ④ 재활용 프로그램 및 정책 강화, ⑤측정 방식의 표준화 및 데이터 수집량 확대를 제시함
 - 포장재 규제와 생산자책임제도⁴⁾를 확대·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는 추세

3) 푸드뱅크: 유통기한이 임박한 등의 사유로, 품질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게 된 식품을 기부해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시설에 나누어주는 물적 나눔 제도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

4) 생산자책임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유럽연합) 자원의 생산→사용→폐기 구조를 탈피하고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 ‘신순환경제행동계획’ 을 발표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해야 함
 -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위한 원칙을 제시함
 - 제품의 환경발자국 저감, 성능·내구성·수리·재활용,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확대, 제품 안전 및 성능의 동시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구성됨

□ 일부 선진국은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강화된 국제 통상정책을 도입 예정에 있음

- (유럽연합) 유럽연합 역외에서 생산되어 역내로 반입된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고탄소배출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를 2025년 시행 예정에 있음
 - 2022년 5월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기업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함
 - (도입 시기) 2026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2024년 시범 적용 후 2025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 (적용품목) 기존의 적용품목 대상이었던 철강, 알루미늄, 전기, 비료, 시멘트에 유기화합품, 수소, 암모니아, 플라스틱이 추가됨
 - (배출범위)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등을 포함하는 등, 간접배출까지 포함해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함
- (미국) 2021년 8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공정전환경쟁법’ 이 미 하원에서 발의됨
 - (도입 시기) 2024년 도입
 - (법안 내용) 고탄소배출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함
 - (적용품목) 화석연료·알루미늄·철강·시멘트 등이 대상으로 식품은 미포함
 - (면제 대상)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최빈국 등

2. 사회(S) · 지배구조(G)

- 인권 신장 ·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법률과 규제로 국내외, 기업의 공급망 전체를 규제하고자 함
 -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공급망 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 정책이 시행 중
 - 이러한 사회 부문 관련 정책은 식품산업에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산업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정책임

-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국내외에 걸친 공급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국제통상정책을 도입 중
 - (일본) 2020년 10월, 공급망 내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 2020-2025’ 이행에 착수
 - 행동계획의 목표는 ①국내외,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②기업의 경쟁력·지속가능성 제고, ③기업의 리스크 회피 및 관리, ④글로벌 투자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함임
 - (일본) 2022년 9월,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 을 발표
 - 일본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의 그룹사·국내외 협력업체까지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
 -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 자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정책과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미국) 2021년 12월, 신장 ·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을 시행

-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의류·작물·토마토 및 면으로 제조한 제품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간주하고 수입을 제한함
- 수입 허가를 위해서는 수입 제품이 강제노동을 동원하지 않고 제조되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유럽연합) 2022년 9월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유럽시장 진입 규제안(2022/0269)’ 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의해 발의됨

-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유럽시장 진입 규제안’의 규제 대상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수입되는 제품은 물론 수출되는 제품과 그 구성 부품
-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수확·추출 등 모든 생산 단계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이 동원된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함

□ 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자체적인 차원에서 경영의 투명성·이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함

○ 기업 내 구성원·이사회 등 기업 조직의 성별·인종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됨

○ (캐나다) 캐나다 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다양성 공개 요건을 개정

- 여성·캐나다 원주민·장애인·소수인종을 포함한 고위 경영진의 구성을 위한 다양성 정책을 공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현황을 공개해야 함
- 정책이 부재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3. ESG 전반

□ 환경·사회·지배구조 전체를 관할하는 지침 및 정책을 도입·시행 예정

- (유럽연합) 2022년 2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전반을 실사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을 발표
 - 기업의 탄소 중립·인권 침해 경영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사를 진행
 - 법안 시행 시 유럽연합 내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환경 보호·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 예정
 - 실사 대상 비회원국 기업은 유럽 현지에 법인을 둔 비EU국가 기업 중 실사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및 EU 회원국 중 실사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세계 기업
- (유럽연합) 2021년 7월,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행동지침인 ‘책임 있는 식품사업 및 마케팅 실천을 위한 EU 행동강령’ 발표
 - 유럽의 식품 공급사슬에 속해있는 식품 소매업자·제조업자·유통업자 등 모든 식품 사업자가 지향해야 할 7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행동지침을 제시

<표 II -1> EU의 식품사업 및 마케팅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목표와 내용

구분	목표
1	유럽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식단 제공
2	식품 폐기물과 손실의 방지 및 감축
3	2050년까지 유럽 내 식품 체인의 기후 중립 달성
4	유럽 내 식품 체인의 순환과 자원 효율성 최적화
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일자리, 적절한 근무환경을 일관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장
6	파트너십을 통한 유럽 식품공급사슬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7	식품공급사슬에서 지속가능한 재료 조달

*출처: 「Launch of EU Code of Conduct on Responsible Food Business and Marketing Practices」, USDA

Ⅲ. 글로벌 ESG 관련 식품기업 경영사례

1. 환경(E)

- 코카콜라, 닛신식품그룹, 하이네켄 등의 식품기업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기술 사용·포장재 무게 감축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함
 - (Coca-Cola) 2030년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25% 감축 예정
 - 매년 공급망의 생산자·협력업체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과 실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함
 - 탄소 배출 감량을 위해 식품 생산 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포장재 혁신을 통한 제품 무게를 감축하고자 함
 - (Nissin Foods Group)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감량 예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열에너지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감량하고자 함
 - (Heineken)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2021년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18.7% 감량함

- 크래프트하인즈, 다논, 아사히 등의 식품기업은 생분해·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로 포장 소재를 변경함
 - (Kraft Heinz) 2025년까지 제품 포장재를 모두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예정
 - 재활용·재사용·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 포장재 등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활용을 통해 친환경 포장 소재로의 전환을 계획
 - (DANONE)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사용·재활용·생분해가 가능한 포장재로 2025년에 전환 예정
 - 불필요한 포장을 생략하고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 비중을 늘려 포장 폐기물을 줄임

- (Asahi)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페트병 포장제품을 친환경 소재 페트병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발표
 - 제품 라벨에 포함된 플라스틱 소재의 비중을 낮추고, 무(無)라벨 제품을 출시해 재활용률을 높임

□ 켈로그, 마즈, 야마자키제빵 등의 식품기업은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

- (Kellogg)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확대, 포장재의 두께를 줄여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97톤을 줄임
- (MARS)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활용·재사용하는 규칙을 통해 매립 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함
- (Yamazaki Baking)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식품 재활용 루프(Loop)를 구축
 - 제조과정 중 발생한 식품 부산물은 사료로, 비식품 폐기물은 에너지원·비료 등으로 활용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
 - 2021년 11월 기준, 28개의 공장 중 24개 공장이 식품 재활용 루프를 통해 식품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지 않음

□ 유니레버, 스타벅스, CJ제일제당(국내기업) 등은 공급망 내의 환경오염을 최소화·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 (Unilever) 2030년까지 150만ha의 산림·토양·바다의 환경 보호와 재생을 위한 지원을 발표
- (Starbucks) 공급망 내의 재생 농업·산림 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CJ제일제당) 아마존 산림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파괴 중단’을 선언

2. 사회(S)

- 테이트앤라일, 벤앤제리스, 아지노모도 등의 식품기업의 공급망 전체의 노동환경과 인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Tate&Lyle) 아동 노동을 통해 생산된 설탕 수입을 거부하고, 설탕 공급업체에 아동 노동 감차 및 조치 시스템을 구축함
 - 공정무역을 통해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Ben&Jerry' s)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의 공정무역 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정무역 식품 생산자의 소득 및 생활수준 보장, 공정무역 식품 공급망 내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 공정무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농가 협동조합 강화 등을 지원·목표함
 - (Ajinomoto) 공급망 내에서 불법 취업, 아동 노동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함
 - 공급망 내의 협력업체에서 강제노동,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함

- 후지오일홀딩스, 맥도날드, 마즈, 아지노모도는 직원의 성별·인종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확대함
 - (Fuji Oil Holdings)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장애인의 고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
 - 고령층을 위한 재취업 시스템을 시행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채택함
 -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위해 2015년부터 장애인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에 주력
 - (McDonald' s)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의 인종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인종별 최소 고용 비율을 설정함

- 아시아계(31%), 흑인(7%), 히스패닉(12%)별 최소 고용 비율을 설정
 - 매장에 고용된 직원의 29%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고용 비율을 설정
 - (MARS) 코코아 농장의 여성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Women for change’ 프로그램 운영
 - 남성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코코아 농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적·경제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Ajinomoto)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일본 시즈오카현의 ‘장애인고용촉진 대회’ 에서 시즈오카현 지사 포상을 수상
- 농심(국내기업), 컴패스그룹, 메그밀크, 맥도날드 캐나다는 기부·농가 지원·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자 함
- (농심) 감자 농가에 멘토 방문 교육·수확 및 영농자금 지원·품질 관리를 위한 수확기 집중 상주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
 - (Compass Group)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병동에 근무하는 근무자·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25t의 식품을 기부
 - (Megmilk Snow Brand) 홋카이도와 종합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농가에 친환경 낙농업 기술을 교육하고, 치즈 제조 기술의 개발·발전·보급에 힘씀
 - 홋카이도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홍보 사업 및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 (McDonald Canada) 캐나다 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포장재 등 소모품의 85%를 캐나다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해 지역 사회와 상생함

3. 지배구조(G)

- 큐피, 메이플리프푸즈, 다논 등의 식품기업은 자체 신고 프로그램 운영·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 (Kewpie) 기업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뇌물수수 방지 체계를 구축
 -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제도를 신설하고, 부정부패 방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함
 - 뇌물수수 방지체계의 실효성 평가가 정기적으로 진행됨
 - (Maple Leaf Foods) 사기·회계부패 등의 부정부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Ethics Line’ 프로그램을 개설
 - 제보자를 돌아올 수 있는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
 - (DANONE) 투명한 로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 알라푸드, 에스엔비식품 등의 식품기업은 이사회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함
 - (Arla Foods) 협력 낙농업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경영구조 확립을 위해 협력 관계에 있는 낙농업자에게 지분을 분배함으로써 이사회 선출에 투표권을 부여함
 - (S&B Foods) 이사회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 기관에 사외 인사를 포함함

IV. 요약 및 결론

1. ESG 경영의 필요성

- 기업의 사회적 역할·윤리적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윤 추구 중심의 경영을 탈피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과거의 기업가치는 경제적 성과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지만, ESG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 등의 비재무적인 성과가 기업가치에 반영됨

-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정부·투자자·고객·신용평가기관·소비자 등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
 - (정부)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은 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함
 - (투자자) 기업의 ESG 경영 성과, 비전에 따라 이사회에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투자자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투자 기준이 높아짐
 - (신용평가기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ESG 경영 계획 및 성과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며 기업 차원에서도 ESG 경영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고객)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 ESG 경영을 요구하는 사례와 ESG 경영 기업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2. 정책 사례

□ 주요국 환경정책의 경우 유럽연합이 선도적으로 환경정책을 도입·시행해 다른 국가들의 환경정책에 영향을 줌

-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함
- 유럽연합은 역외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수립·시행 예정임

〈표Ⅳ-1〉 주요국 환경(E) 정책 사례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	순환경제 정책	통상정책
대한민국	<p>〈2050년 탄소 중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30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설정) 	<p>〈순환경제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2027) (2027년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을 20% 감소) 	-
일본	<p>〈2050년 탄소 중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전략 및 식품부문의 녹색식품시스템 전략 (2030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3년의 46% 수준으로 설정) 	<p>〈식품 폐기물 및 손실 감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손실감소추진법 	-
중국	<p>〈2060년 탄소 중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행동백서 (2030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6년의 65% 수준으로 설정) 	<p>〈순환경제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차 5개년 순환경제발전계획 (2021~2025) (2020년 대비 자원 생산성 20% 향상) 	-
미국	<p>〈2050년 탄소 중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2030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5년의 50% 수준으로 설정) 	<p>〈순환경제로 시스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활용전략 (국가 재활용률 50%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전환경쟁법(발의) (고탄소배출제품에 탄소세 부과, 식품 미포함)
유럽연합	<p>〈2050년 탄소 중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기후법 (2030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1990년의 55% 수준으로 설정) 	<p>〈자원 생산구조 탈피·순환경제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순환경제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국경조정제도 (고탄소배출제품에 탄소세 부과, 2025년 시행 예정이며 식품 미포함)

- 주요국의 사회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망 내에서 노동자 인권·강제노동 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도입·시행 중

〈표Ⅳ-2〉 주요국 사회(S) 관련 정책 사례

국가	정책
일본	-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2020-2025) (공급망 내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계획)
	-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인권 존중을 위한 계획 요구)
미국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
유럽연합	-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유럽시장 진입 규제안(발의)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동원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

-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경우 정부의 규제나 정책보다는, 주로 기업 차원에서 경영의 투명성·이사회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캐나다 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고위 경영진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공개해야 함

-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정책을 도입·시행 예정임

〈표Ⅳ-3〉 주요국 ESG 전반 정책 사례

국가	정책
유럽연합	-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기업의 탄소중립·인권침해 경영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사 진행)
	- 책임 있는 식품사업 및 마케팅 실천을 위한 EU 행동강령 (유럽의 식품 공급사슬에 속해있는 식품사업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행동지침 제시)

3. 기업 사례

<표 IV-4> 글로벌 식품기업 분야별 ESG 경영사례(요약)

구분	경영 유형	ESG 경영사례
E	탄소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a-Cola) 2030년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25% 감축 예정 - (Nissin Foods Group) 2031년까지 폐기물의 99.5%를 재활용할 예정 - (Heineken) 제조과정에 필요한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2021년 기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18.7% 감축
	친환경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aft Heinz) 2025년 전 제품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 예정 - (DANONE) 포장을 간소화하고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확대해 포장 폐기물을 절감 - (Asahi) 2030년 페트병 제품의 100%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 예정
	폐기물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llogg) 제품 포장 두께를 17% 줄여 플라스틱 포장 97톤을 감축 - (Mars) 폐기물을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활용·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 제로화 달성 - (Yamazaki Bakin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부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식품 재활용 루프를 구축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
	환경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lever) 2030년까지 150만ha의 산림·토양·바다 보호와 재생 지원 - (Starbucks) 재생농업, 산림보존, 공급망의 물 자원 활용을 위한 투자 확대 - (CJ제일제당) 공급망 내의 아마존 산림파괴 최소화를 위한 선언 발표
S	기업 내 다양성·평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ji Oil Holdings) 장애인 사원의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간 근무를 장려함 - (McDonald's)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종적 구성 비율을 설정 - (MARS) 공급망 내 여성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Ajinomoto)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시즈오카현 지사 포상을 수상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n&Jerry's) 공정무역재료를 사용해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함 - (Ajinomoto)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공급망 전체 모니터링을 진행 - (Tate&Lyle) 아동 노동을 통해 생산된 설탕 수급을 거부하고 설탕 공급업체에 아동 노동 감사 및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요구
	지역 사회와의 상생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심) 감자 농가에 기술 컨설팅·자금 지원·수확기 인력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함 - (Compass Group) 잉여 식품을 지역 사회의 병원·사회적 취약 계층 등에 기부 - (Meiji Milk) 핫카이도와 종합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해 핫카이도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노력함 - (McDonald's Canada) 점포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포장재 등의 85% 이상을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조달
G	부정부패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wpie) 내부 규정을 강화해 뇌물수수 방지체계를 구축함 - (Maple Leaf Foods) 기업 내 부정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운영 - (DANONE) 경영 투명성 확보와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la Foods) 주요 공급망인 낙농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경영구조 확립 - (S&B Foods) 기업 내 이사회에 사외 인사를 포함하고, 이사회 전체·감독 조직을 설치해 이사회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삼정KPMG(2021)
2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삼정KPMG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법률신문, 2022.06.03.)
4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kwaste.or.kr)
5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meti.go.jp)
6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 (maff.go.jp)
7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01.20.)
8	중국 국무원 정보실 (scio.gov.cn)
9	「Presidential Documents-Executive Order 14008 of January 27, 2021,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Federal Register(2021.01.27)
1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주요국의 대응 전략(에너지신문, 2022.01.07.)
11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caa.go.jp)
1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ndrc.gov.cn)
13	미국 환경보호청 사이트(epa.gov)
14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European Commission
15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European Commission
16	Update: New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BAM, Deloitte
17	EU 이어 美도 ‘탄소장벽’ 속도…정부 “기업 부담 최소화”, (한국무역협회 통상뉴스, 2021.08.11.)
1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mofa.go.jp)
19	第3回 「ビジネスと人権」に関する日本政府の対応状況と日本企業の取り組み動向(제 3회 ‘비즈니스와 인권’ 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과 일본 기업의 대처 동향, (Business Lawyer, 2021.01.07.)
20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cbp.gov)
21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Goes into Effect (CSIS, 2022.06.27.)
2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European Commission
23	Expanded Diversity Disclosure Requirements for CBCA-Incorporated Reporting Issuers Coming in 2020(Practical Law, 2019.07.16.)
24	유럽연합, 2050 탄소중립 위해 ‘책임 있는 식품사업 및 마케팅 실천을 위한 EU 행동 강령’ 발표 (FoodICON, 2021.10.12.)
25	「European Union: Launch of EU Code of Conduct on Responsible Food Business and Marketing Practices」, USDA
26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Commission lays down rules for companie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in global value chains」, European Commission(2022.02.23.)
27	「2021 Business & ESG Report」, Coca-Cola
28	일본 식품기업 Nissin Foods Group 홈페이지(nissin.com)
29	「Heineken N.V. Annual Report 2021」, Heineken
30	「DANONE Integrated Annual Report 2021」, DANONE
31	일본 식품기업 Asahi 홈페이지(asahibeer.co.jp)
32	식품기업 Mars 홈페이지 (mars.com)

33	식품기업 Kelloggs 홈페이지 (kelloggs.com)
34	식품기업 Yamazaki Baking 홈페이지(yamazakipan.co.jp)
35	식품기업 Starbucks 홈페이지 (starbucks.com)
36	식품기업 Ben & Jerry' s 홈페이지 (benjerry.com)
37	식품기업 Ajinomoto 홈페이지 (
38	식품기업 Fuji Oil Holdings 홈페이지 (fujioilholdings.com)
39	식품기업 McDonald' s 홈페이지 (corporate.mcdonalds.com)
40	식품기업 Compass Group 홈페이지 (compass-group.co.uk)
41	식품기업 Kewpie 홈페이지(kewpie.com/en)
42	식품기업 Maple Leaf Foods.com 홈페이지 (mapleleaffoods.com)
43	식품기업 S&B Foods 홈페이지(sbfoods-worldwide.com)
44	비영리 공정무역 재단 The Fairtrade Foundation 홈페이지(fairtrade.org.uk)
45	식품기업 MegMilk Snow Brand 홈페이지 (meg-snow.com)
46	食品メーカーの人権デューデリジェンス 味の素株式会社・事例(식품제조업체의 인권 실사: 아지노모도 주식회사 사례), (earth sustainability, 2022.02.23.)
47	창간 25주년 특집 II -식품업계 ESG, (식품음료신문, 2021.09.16.)
48	「농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농심